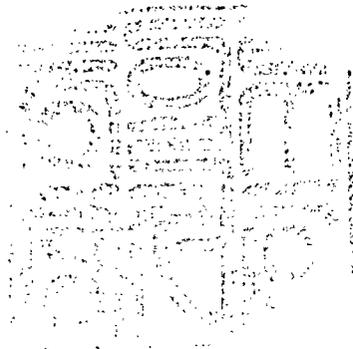


남북관계 현황 참고자료

2008 남북관계 어떻게 추진되었나?



2008. 12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목 차

I. 2008년 남북관계 평가	1
II.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	3
붙임 : 1. 2008년도 남북관계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5
2. 남북관계 관련 주요 쟁점.....	18
3. 남북관계 주요 통계	22
4. 남북관계 주요 일지	26

I. 2008 남북관계 평가

-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남북한 주민의 행복 추구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고, 지난 3월에는 향후 대북정책방향을 상생공영으로 결정
 -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추구 (3.26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 이를 위해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고 교류협력을 지원
- 그러나 북한은 3월말부터 대남 강경조치와 함께 비난 지속
 -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측 당국자 철수(3.27)
 -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 및 접촉 거부(3.29)
 - 4.1부터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 비난
 -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비핵·개방·3000」의 폐기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을 요구
-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7.11)으로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가중
 -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7.12)
 - 그러나 다른 남북관계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상황 악화 차단
- 10월부터는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북한의 대남 위협 강화
 - 10.2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대북 비난 전단 살포를 지속할 경우에는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 초래,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금강산 지구 남한 체류인원 제한 경고
 - 11.12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 △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을 통해 “12.1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차단” 통보 및 적십자 중앙위 성명을 통해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 통보

- 12.1부터는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통제, △경제협력협회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단 상주 체류인원 절반 감축
- 이러한 북한의 조치로 금년 한해 동안 의미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는 열리지 못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등 당국간 협력사업도 중단
- 그러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
 - 남북왕래인원은 작년 대비 24.8% 증가 : 17만 5천명(11월 기준)
 - 남북교역 3.7% 증가 : 약17억달러(11월 기준)
 - 개성공단은 작년 동기 대비 △가동기업 수 88개로 38% 증가(11월 기준), △생산액 20,958만 달러로 43% 증가(10월 기준), △북측근로자 3만 7천명으로 74% 증가(11월 기준) 등
- 한편 남북협력기금절차 전반에 걸친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기금 지원항목 세분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대상 확대, △기금 지원 단체의 집행 모니터링 강화 등 기금제도 개선
 -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민간단체가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 지원물자를 구입하도록 조치
 - △기금 집행심의절차 강화(2단계→4단계), △기금집행 결과 공개 등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 ※ △기금집행 실적 공개(통일부 및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남북협력기금백서」 발간

○ 금년도 남북관계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정기」로 평가

- 북한의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는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 유도, △체제내부 단속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황에 유연한 접근을 통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남과 북의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임.

II.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

- 정부는 정부출범과 함께 '이념'이 아닌 '실용'의 정신 하에 상생 공영정책을 제시
 - 남북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
 - 대통령이 직접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제의
 - 4.17 상설연락기구 설치, 6.6 진정성 있는 대화, 7.11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8.15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 천명, 9.22 모든 남북간 합의의 정신 존중 및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한 대화 촉구 등
- 상생공영정책은 남북관계 현실 속에서 세가지 형태로 구체화됨.
 - 첫째, 우리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 * 12개 추진과제 : △「비핵·개방·3000」 이행계획 수립,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산림 녹화, △농수산협력,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등
 - 상생공영정책의 실행계획으로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발전시켜 왔으며, 「비핵·개방·3000」 정책이 先 핵포기론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입장으로 정립
 - 6.15, 10.4 선언 이행문제 협의 용의 표명(4.29)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 입장 견지
 -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대북 옥수수 지원 의사 표명
 -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지속
 - * 농촌개발보건의료·사회복지 등 민간단체를 통해 약 165억원, WHO와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1,600백만달러 지원

-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04억원 집행 의결(11.14)
- 대북지원단체의 금강산 지역 연탄 전달 등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추진(11.18)
- '08년도 저조한 기금집행에도 불구하고(11월 기준 16%)하고 내년도 기금 사업비를 1조 5천억원으로 편성

- 둘째, 북한의 강경조치에 대해 맞대응을 하지 않음.

- 북한의 대남비난이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의연하게 대응
- 우리의 무고한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인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했지만 정부는 이 사건을 다른 남북관계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분리하여 대처

- 셋째,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개성공단, 개성관광 등 기존 경험 사업을 지속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

-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에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
- 남북 군사통신 자재·장비 제공 관련 대북 제의(11.13)
- 개성공단 폐기물 소각장 및 탁아소 건설비용 확보(11.18)

○ 국민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 화해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과감하게 개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추구
-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 초당적 협조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균형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 함으로써 남남갈등 방지에 최선

- 붙임 : 1. 2008년도 남북관계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2. 남북관계 관련 주요 쟁점
 3. 남북관계 주요 통계
 4. 남북관계 주요 일지 ㉠

2008년도 남북관계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1.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수립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검토

- 과거 대북정책은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특히 북한이 '06년 핵실험을 한 이후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고조
- ※ '08년 3월 국민여론조사(3.19~21, 민주평통)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수립

-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더 「생산」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실용」으로 접근하고, 남북주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힘.(2.25)
- 정부는 통일부 업무보고시 남북관계를 상생공영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보고(3.26)
-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할 교류협력사업에 관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 전달(6.6)
-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에서 '상생공영의 길'을 제시하며 6.15 및 10.4 등의 이행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용의 표명(7.11)
- 대통령 8.15경축사에서 통일한국의 꿈을 제시하며 남북대화제의(8.15)

- 대통령 민주평통 지역회의 개회사에서 “남북한은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9.22)

○ 상생공영정책의 체계

- 비전 :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행복공동체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건설

* △평화공동체(비핵화 +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공동체(북한의 발전 + 상생의 남북경협), △행복공동체(인도적 문제 해결 + 7천만의 행복 추구)

- 원칙(4가지) :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 주요과제(5가지) : △실질적인 남북대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 상생공영정책의 특징

- 남과 북이 서로 Win-Win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추구
- 대북 화해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단계 더 높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
-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 정책 추진방식에서 국민 합의를 강조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투명한 정책을 추진,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방지
-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

○ 상생공영정책 홍보자료 발간·배포

- 국내용(5만부) 및 해외용(영·일·중문, 7천부) 상생공영정
설명자료,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발간·배포

- 국·영문 홍보 리플렛(2종, 11만부) 발간·배포

- 홍보만화(10만부) 제작 협조(유관기관)·배포

* 정책설명자료는 이명박 정부 최초로 대북정책의 기본개념과 철학을 설명
하는 자료로 남북관계 전문가 대상, 리플렛 및 홍보만화는 젊은 층 대
상으로 배포했으며, 해외용 홍보자료는 150여개 해외공관을 통해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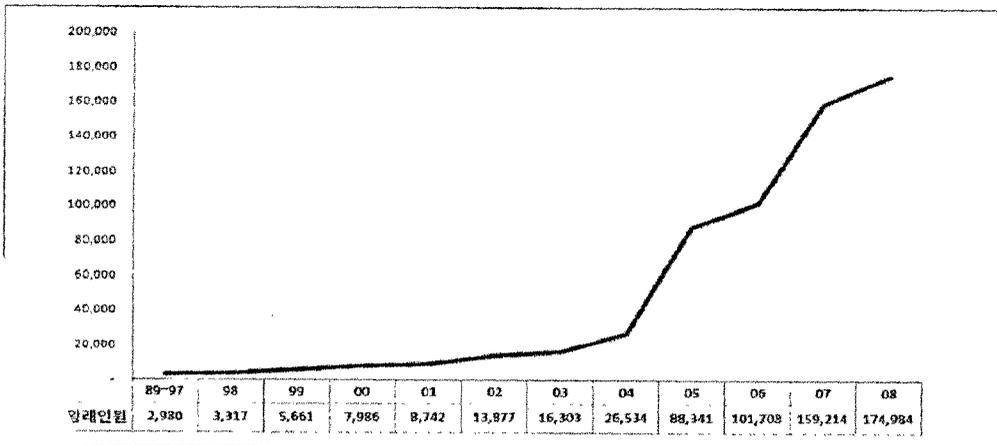
2. 남북교류협력의 지속 추진

□ 인적왕래

○ '08.1~11월 중 남북왕래인원은 174,9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관광객 제외)

- 당국간 대화 중단 등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생산
확대 등으로 인적 왕래 증가세 유지

【 연도별 인적왕래 추이 】



□ 남북교역

- '08년 남북교역은 남북관계 조정 속에서도 증가세 지속
 - 금강산 관광 중단, 인도적 지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거래 위주로 안정된 교역추세 시현
 - '08.1~11월 중 교역규모는 16.9억 달러(반입 8.6억 달러, 반출 8.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 교역 내용면에서도 개성공단과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거래가 남북교역의 근간(전체 93.9%)으로 정착
 - 특히 위탁가공의 증가와 품목 다변화(전자제품 제조 등) 추세가 두드러짐.
 - ※ TV 및 라디오카세트 반입실적 각각 전년 동기대비 161.3%, 129.2% 증가
- 남북간 일부 품목의 교역은 국내시장 활성화 및 안정에도 기여
 - △모래반입, 수도권 연간 수요량(3,342만8천m³)의 27% 반입으로 가격 안정, △간마늘 임가공 전년 동기 50.2% 증가, 국내 마늘농가 생산 증대 효과 등
- 육로·해로·항공로 등 수송장비 운행도 안정적으로 진행, 인적·물적 왕래를 지원
 - '08.1~11월 중 △자동차 : 편도 194,672회(416,593톤) △항공기 : 편도 64회 △선박 : 편도 5,908회 운행
 - ※ 특히, 항공분야는 우리 국적기 운항비율(43.75%)이 전년도(54회, 35.3%)에 비해 증가

□ 민간경협

- 개성공단 이외의 대북 민간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
 - '08.1~11월 중 총 9건의 신규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전년(5건) 대비 80% 증가
 - ※ '08.11월 현재까지 평양·남포 34개, 개성인근 9개, 금강산 고성 5개, 원산 등 기타지역 5개 등 총 53개 경제협력사업 승인

- '08.1~11월 중 신규 투자 승인액은 5,317.4만 달러로 전년 동기 (1,785만 달러) 대비 약 198% 증가
- o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 자원(석산) 개발 등으로 사업 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
- o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조치 이후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남북경협 사업이 동요하지 않도록 분야별 간담회 개최
- △금강산 투자업체(12.4) △평양·개성 등지 투자업체(12.5) △교역업체(12.8) △IT협력업체(12.9) △위탁가공업체(12.10) 등

□ 개성공단 사업

- o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관계 조정 가운데 성장세를 지속 이어가고 있음.
 - 작년 동기 대비 △가동기업 수 88개(11월 기준, 38% 증가), △생산액 20,958만 달러(10월 기준, 43% 증가), △북측근로자 3만7천명(11월 기준, 74% 증가) 등
- o 정부는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 및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주력
 - △협력기금 차주전환 및 거치기간 연장(금융애로 경감), △출퇴근 버스 100대 추가투입(원활한 인력공급), △탁아소 건설, 소각장 증설 등(기반시설 확충)
- o 특히 북측의 12.1 제한조치 이후, 입주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강구
 -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원부자재, 제품 반출 등 통행편의 적극 지원, △개성공단 생산제품 판매 전시회 개최, △기업애로 및 피해실태 파악지원 등

□ 관광협력

- '08.6월까지 금강산 관광은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하였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7.11) 및 관광 중단(7.12)으로 차질
 - 7.11까지 관광객은 199,966名으로 85% 증가
 -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
 - 정부는 동 사건을 다른 분야 남북관계와 분리 대응하여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차단
 - 금강산 사건 직후 개성관광에 대한 △방북·안전교육 강화 △안전 요원 증원 △안전시설 보수·신설 등 신변안전 조치 마련
- 북한은 11.24 육로통행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관광 중단을 통보, 이에 대해 현대아산은 11.29부터 관광 중단
- 현재 중단된 금강산·개성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사회문화교류

- 당국간 경색국면 속에서도 체육, 종교, 교육학술 등 분야별 사회 문화교류는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
 - 「6.15 민족통일대축전」(6.15-16) 및 언론·농민·여성·청년학생·교육 등 부문별 교류행사 활발하게 추진
 - 체육분야는 북한 레슬링·유도·축구대표팀 방한, 남측 유소년 축구팀 방북행사 등 진행
 - 종교분야는 평양 봉수교회 헌당예배(157명), 장충성당 미사(96명), 평화통일기원 기도회(99명) 등 대규모 남북 공동기도회 성사
 - 교육학술분야는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북한 IT 인력 교육,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통일문학 공동발간 등 추진

- 사회문화교류는 대부분 방북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3월),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4월), 남아공 월드컵 남북축구 경기(6월) 등 3차례의 방남 행사도 개최
 - 민족동질성 회복 및 역사유적 보존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병행
 - 겨례말큰사전편찬사업(32억원), 개성만월대 발굴사업(3억6천) 등
 - 지자체 대북교류사업은 종래 단순지원 중심에서 점차 협력사업으로 심화·발전
 - 경기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강원도 안변 연어사료공장, 제천시 북고성군 과수농장 사업 등
- ※ 13개 지자체에서 총 638억원 규모의 자체 교류협력기금 조성

□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기금사용 절차 전반에 걸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 기금 지원항목 세분화를 통한 임의적 집행가능성 방지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대상을 조정, 심의 대상 확대
 - 기금 지원 단체의 집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강화
-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민간단체가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 지원물자를 구입하도록 조치
-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편 등을 통해 기금 집행 심의절차를 기존 2단계 → 4단계로 강화
 - 기금집행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기금 운용에 대한 환류 강화
- ※ △기금집행 실적 공개(통일부 및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남북협력기금백서」 발간

□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제고
 - △일정한 경우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 근거 마련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소액투자 협력사업 신고제 도입 등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출금 차주 변경 등 대북 사업자의 애로 해소 차원의 제도 개선 추진

3. 인도적 현안 해결 노력

□ 대북지원

-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 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은 예년 수준으로 지속 추진
 - 다만, 북측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당국 차원의 지원은 미성사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농업·보건의료·사회복지 등 44개 지원사업에 146억원 지원
 - 농촌개발 등 2개 합동사업에 약 18억5천만원 지원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사업에 118만달러 지원
 - WHO와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1,434만달러 지원
 - IVI(국제백신연구소)의 백신지원 사업에 50만불 지원

□ 이산가족문제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08.7), 남북관계 재개 대비
 - 현재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면회소 시설 유지·관리중
- 당국간 상봉행사 중단에 따른 이산가족 위로 및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설명
 - 고령이산가족 대상 통일부장관 위로편지 발송('08.6, 3만여통)
 - 8.15계기 이산가족 초청행사 개최('08.8, 전국 7개 지역, 670여명 참석)
 - 추석과 연말 계기 소외 고령이산가족 위로방문('08.9·12, 전국 9개 지역)
- 향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제반 실무준비 계속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 ※ 주요내용 :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이산가족 실태조사,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경비지원, 이산가족 관련 단체 지원 등
 -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 ※ 08.11말 현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287건, 1억5백만원의 교류경비 지원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
- '08.11월말 현재 국군포로 76명('08년 6명), 납북자 7명('08년 1명)이 탈북후 국내 귀환
 - ※ 현재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 납북억류자는 494명 추정

- 남북피해자 구제·지원 등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꾸준히 진전
 -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07.10월 시행)에 의거, 피해위로금 및 귀환자 정착금 등 총 172건을 심의, 56억 1천만원 지급
 - 생계곤란 남북자가족 50가족 위로방문 실시(추석 20가족, 연말 30가족)
 - 남북자가족 의료지원 및 위로행사(11.2일 동해지역 20가족 대상)
 - 남북피해자 이동민원실 개설, 정책설명 및 피해위로금 신청 접수 (2회, 11.10~12 강릉, 12.3~5 거제)

□ 북한 인권 개선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류보편적 가치 구현 차원에서 접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제63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추진 관련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찬성 투표(11.21, UN총회 제3위원회)
 - NGO 발행 북한 인권 관련 간행물 국내외 배포 지원, NGO 주최 세미나 지원 등 인권단체와의 협력 확대
-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 국제 인권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입국은 '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08.11월말 현재 14,720명이 입국
 - '08.11월말 현재 2,472명이 입국,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맞추어 교육·수용시설인 하나원 준공(12.18)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을 위해 관련부처 및 기업체·NGO등과 협력 강화,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꾸준히 전개
 - 사회적 기업 설립 : 통일부·열매나눔재단·(주) 메자닌푸드텍이 협력하여 메자닌 아이팩 설립(22명 채용),
 - 맞춤형 취업연계 직업훈련 : (주)CJ푸드빌(제빵기능사 훈련후 18명 채용), (주)아라코(조리사 훈련중)
 - OJT 방식 : (주)GM 대우자동차는 북한이탈주민을 단기근로자로 고용, 현장훈련 실시후 정규직원 채용(24명) 등
- 지역사회와의 관심제고를 위해 노동부와 협력 하에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전국적으로 11월 중에 집중 개최
 - ※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11.6) 외 6개 고용지원센터에서 권역별로 개최
- '05년 장려금제도 도입이후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규모 (약 22억원) 지속적으로 증가(전년 대비 123% 증가)
-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특성화학교(한겨레 중·고교), 대안학교 등의 역할 강화

4. 국민적 합의 노력

□ 국민 참여기반 확충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활동 적극 전개
 - 언론인·학자·전문가 및 여론 주도층과의 대화를 상시 개최 (3~4회/주)
 - 대북정책 해설자료(PPT)를 활용하여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노력(5.1~8.31, 2만여명 대상)

- '상생공영포럼' 창설(11.13)을 통한 국민과의 상설대화통로 구축
 - * 제2회 상생공영포럼은 통일교육위원 대상 12.26 개최 예정, 이후 여성계, 문화계, 대학생 등 대상별로 정기적 실시 계획
- 순회홍보팀을 구성, 지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정책설명 실시(16개 시·도, 총 302회 18,750여명 대상)
- 통일부 간부 및 직원들이 학교, 단체 대상 일일통일교사 실시(12.10 현재, 134건)
- 상생공영정책 정립을 위한 자문기구 활성화
 - 정책자문회의 전체회의(년1회 이상) 및 분과별 회의(분기별) 개최, 통일고문회의 고문 신규 위촉 준비

□ 통일교육 개편

- 2008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교육 지침서」 마련
 -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등을 통일교육 추진방향으로 설정, 통일교육의 균형성·객관성 제고
- 기본·전문·특별·사이버 과정으로 통일교육과정 개선
 - 2008년도 31,821명 대상 교육 실시(11월말 현재)
- 분야별·대상별 통일교육 참고자료 개발·지원
 -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배포
 - ※ 「북한이해」(20,000부, 5월), 「통일문제이해」(17,000부, 6월)
 - 북한실상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제작
 - ※ △북한실상 영상자료 「북한 국민들의 하루생활」, 「북한학생들의 학교생활」, △상생공영정책 PPT 및 동영상자료, △청각 장애인용 영상자료 「해미의 행복 통일한국」, △방북교육 동영상 자료 △「북한의 체육실태」, 「통일교육소식」 등 발간
-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사이버 방북교육 준비('09년부터 실시)

□ 통일 대비 인력양성 및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 「통일미래지도자과정」, 「남북협상공정」 등 대북 인력양성 과정 운영
 - *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 국가기관 국·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35명 대상
 - 남북관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역량, 통일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및 통합조정 능력 배양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노력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13회), '청소년 통일체험학습'(10회) 실시
 - 참여 및 체험 학습장인 「통일문화페스티벌」 개최(10.30-31)
 - 대학에서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통일포럼'(10회),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47편), 주요대학 통일문제연구소장 간담회(9.29) 실시

남북관계 관련 주요 쟁점

① 현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원인이 우리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상생공영정책은 대북화해협력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강경정책이 아님.
- 상생공영정책은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발전시키되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점은 개선
- 현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이 우리 정책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화를 중단하면서 일련의 강경조치를 취한데서 비롯됨.
- 남북대화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인적 왕래와 물자 교역, 개성공단 등은 활성화되어 왔음.

②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 북한은 정부가 「비핵·개방·3000」정책을 추진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주장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
- 그러나 「비핵·개방·3000」정책은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先 핵폐기론이 아님.
 - * 「비핵·개방·3000」정책은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임.
 - * 사실상 핵문제 해결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전략

-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인한 바 없음.
 - 우리 정부는 4월부터 6.15/10.4 선언의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그 이행 방안에 대해 북한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제의
 - 북한은 우리에게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스스로가 이를 위반
- 정부는 관련 민간단체들에게 대북 전단살포 자제를 설득
 -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이는 남북간 합의정신에 배치되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정부의 자제 설득에 관련단체들이 협조
 - 북한도 관영매체에 의한 대남비난을 즉각 중단해야 함.
- 우리정부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 추진
 - 상생공영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Win-Win과 화해협력을 추구
 - 정부는 지속적으로 화해지향적 대북 조치 추진
 - * △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 △ 인도적 지원 입장을 계속 밝혔고, 옥수수 5만톤 등 조건없는 지원 추진,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해결을 위해 당국간 협의 추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권장하고 지원 (협력기금 지원), △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등
 -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는 '08년도 저조한 기금집행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기금사업비를 1조 5천억원을 편성한데에서도 잘 나타남.
- 남북관계의 경색이 우리 정부의 강경정책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우리 내부의 일부 비판은 근거 없으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음.

③ 정부가 대북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음.
 - 국제기구 등에서 북한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옥수수 5만톤 지원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수용하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추진할 수 없었음.

④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통미봉남(通美封南)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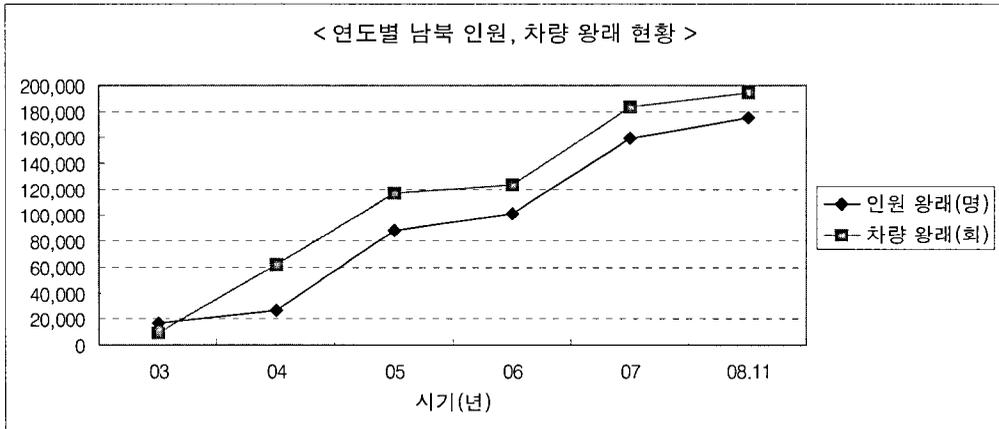
-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등 현실을 무시한 용어임.
 - 중요한 것은 한미간 긴밀한 상호 정책 조율임.
- 한국과 미국은 50년 이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
 -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통미봉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음.
 -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

⑤ 유엔 대북인권 공세는 대북압박용이 아닌가?

- 우리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결코 정략적·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님.
-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룬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이번 유엔 인권결의안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찬성입장을 밝혔음.
 - * 제63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95):반대(24):기권(62)로 채택
- 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결국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것임.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08.11월말 현재)

□ 남북 인적·물적 왕래



○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남→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74,657	602,163
북→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27	7,484
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74,984	609,647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 남북 차량왕래 현황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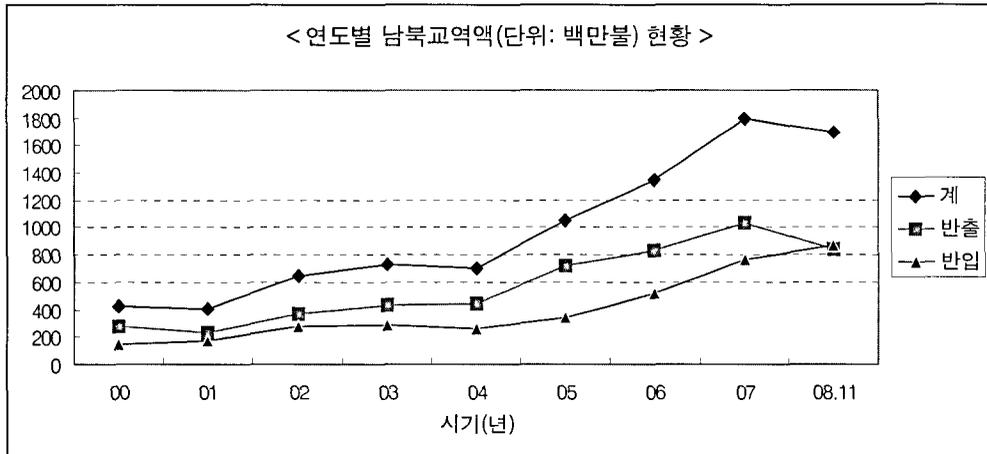
구분		'03	'04	'05	'06	'07	'08.11	계
운행회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70,167	518,457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4,505	170,887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194,672	689,344

○ 남북 선박왕래 현황(편도기준, 분기별 집계)

<단위 : 회>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계
운항회수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5,908	43,828

□ 남북 교류협력 분야



○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862	5,100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36	5,793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698	10,893

○ 금강산/개성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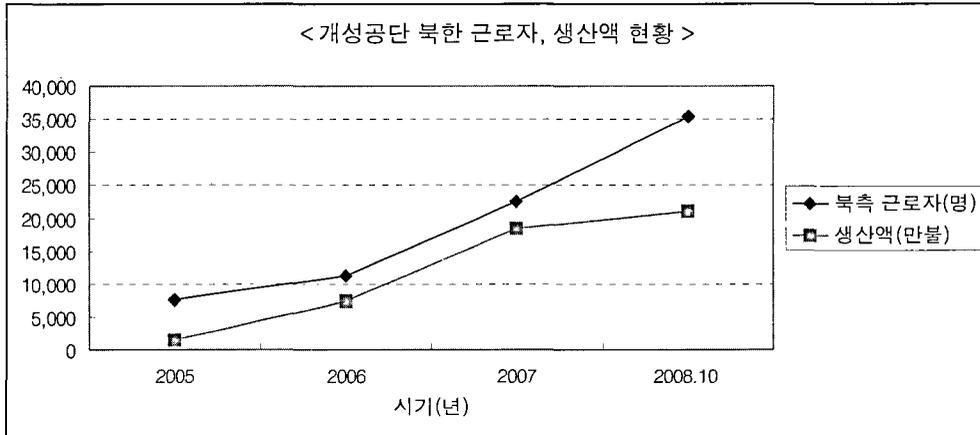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552,99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112,033

○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구분	'91-'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경제협력	16	2	5	2	2	26	39	23	176	57	348
사회문화협력	13	5	6	7	13	16	47	26	20	3	156

□ 개성공단사업 분야 (2008.10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적조사로 인해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1~11	계
가동기업수	11	30	65	88	88
생산액	1,491	7,373	18,478	20,958 (10월 기준)	48,300 (10월 기준)

○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11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36,618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1,500여명(추정치)
합계	8,111	11,951	23,323	38,118(추정치)

□ 인도적 과제 추진 분야

○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합계	
정부원	무상지원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357	14,087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8,728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357	22,815
민간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633	7,793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990	30,608	

○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연도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44	44	3,785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09	209	11,302	
	재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383)	165 (471)	203 (592)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53 (164)	31 (88)	31	31	1,670 (3,165)
	방북상봉										1 (2)	5 (18)	4 (9)	5 (22)	5 (24)	3 (15)	1 (5)	1 (5)	4 (19)	1 (5)	3 (5)	3	33 (129)
정부차원	생사확인	65 (157)											792 (7,543)	744 (2,670)	261 (1,63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	-	6,733 (48,495)
	서신교환												39 (39)	623 (623)	9 (9)	8 (8)	-	-	-	-	-	-	679 (679)
	방남상봉	30 (81)											201 (1,720)	100 (899)	-	-	-	-	-	-	-	-	331 (2,700)
	방북상봉	35 (76)											202 (674)	100 (343)	398 (1,724)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	-	3,112 (13,669)
	화상상봉																	199 (1,323)	80 (553)	278 (1,872)	-	-	557 (3,748)

□ 남북회담 분야

○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71-'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정치	189	18	2	4	5	2	10	5	13		248
군사	0	4	2	9	6	5	3	4	11	2	46
경제	5	3	3	14	17	13	11	8	22	3	99
인도	119	2	1	3	7	2	4	3	3		144
사회문화	34			2	1	1	6	3	6	1	54
합계	347	27	8	32	36	23	34	23	55	6	591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08.11월말 현재)

날짜	주요 내용
1월	
1.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29~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월	
2.4	2008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개성)
2.5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및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판문점)
2.12~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19~23	남북당국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
2.26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동평양대극장)
3월	
3.16~24	'08아시아 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3.17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3.26~23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3.25~26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 파견
3.26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 경기(상하이)
3.27	북한 요구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4월	
4.8	북한의 열차 운행사무소 직원 출입제한 조치로 운행사무소 직원 탑승없이 화물열차 운행
4.24~2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5월	
5.13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석
5.13~20	중앙일보 기획취재단 18명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시회」 참가
5.23	6.15 남측위,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협의차 개성 방북
5.29	민주노동당 정성희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금강산)
5.29~5.30	전교조 정진화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금강산)
5.30	6.15 학술본부 이서행 상임공동위원장 등 5명, 「2008년도 협력사업」 협의차 방북(개성)
6월	
6.15~16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6.14~26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북한방문 경기(평양)

날짜	주요 내용
6월	
6.19~20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제2차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개성)
6.19~23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참가 북한선수단(손광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등) 방남
7월	
7.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금강산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완료
7.12~15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조사차 방북(금강산)
7.24	남북 노동자 3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직업 총동맹) 실무접촉(개성)
7.25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정부합동조사단, 활동경과 브리핑
8월	
8.1	금강산 관광객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모의실험 결과 발표
8.3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사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8.12	금강산 사건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 남북 모래운반선 동이1호(658t), 장전항 북동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과 충돌
8.14	남측 모래운반선 동이1호, 남측 귀항, * 北, 핵 불능화 중단 선언
9월	
9.23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협의 관련 6.15 남북위원장 개성 접촉
9.23~27	6.15 남측위 지역본부 50명, 지역교류 협의차 평양 방북
9.30	MBC 관계자, 북한 명산 취재 협의(개성)
10월	
10.1	* 힐 차관보 방북(판문점 통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면담 - 북핵검증의정서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 협의
10.2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10.8~18	남북체육교류협회 50여명, 유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 참가(평양)
10.11	* 美, 북 테러지원국 해제
10.16	北, 노동신문 논평원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10.27	北, 남북 군사실무접촉시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과 개성 관광 등에 악영향" 경고
10.28	北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발언 "삐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날짜	주요 내용
11월	
11.12	北, △판문점 적십자 전화채널 차단, △육로 통행 제한·차단 경고, △핵 검증 관련 시료채취 합의 부인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지문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11.13	우리 국방부, 北에 군 통신선 자재 장비 제공의사 통보 ※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장비 제공 관련 협의”
11.14	개성공단 기반시설 개선 및 탁아소 건설,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등 남북협력기금 104억원 집행 의결
11.18	금강산 관광 10주년 연탄전달 등 대북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 지역 방문 허용
11.19	관계부처회의, 대북 전단지 살포 자제 위해 적극 대응 결정
11.21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처음 참여)
11.24	北, 12.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조치 시행 통보
11.26	北 명승지개발지도국, 금강산 남한 체류인원 50%로 제한 통보
12월	
12.1	북한의 「12.1조치」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 유감표명, 남북합의 위반 지적, 철회 촉구 및 당국간 대화 제의

/끝/